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김동훈 부연구위원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이정표가 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질 격차 해소 및 질 제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한 이정표이다. 계획에서는 이전의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인 국민에 의한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또한 문재인정부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설정하였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

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육아정책 관련하여서는 저출산 대응,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복지, 보육·유아교육, 안전, 환경, 통일 등 다양한 주제와 연관되어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육아정책과 관련 국정과제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육아정책관련 국정과제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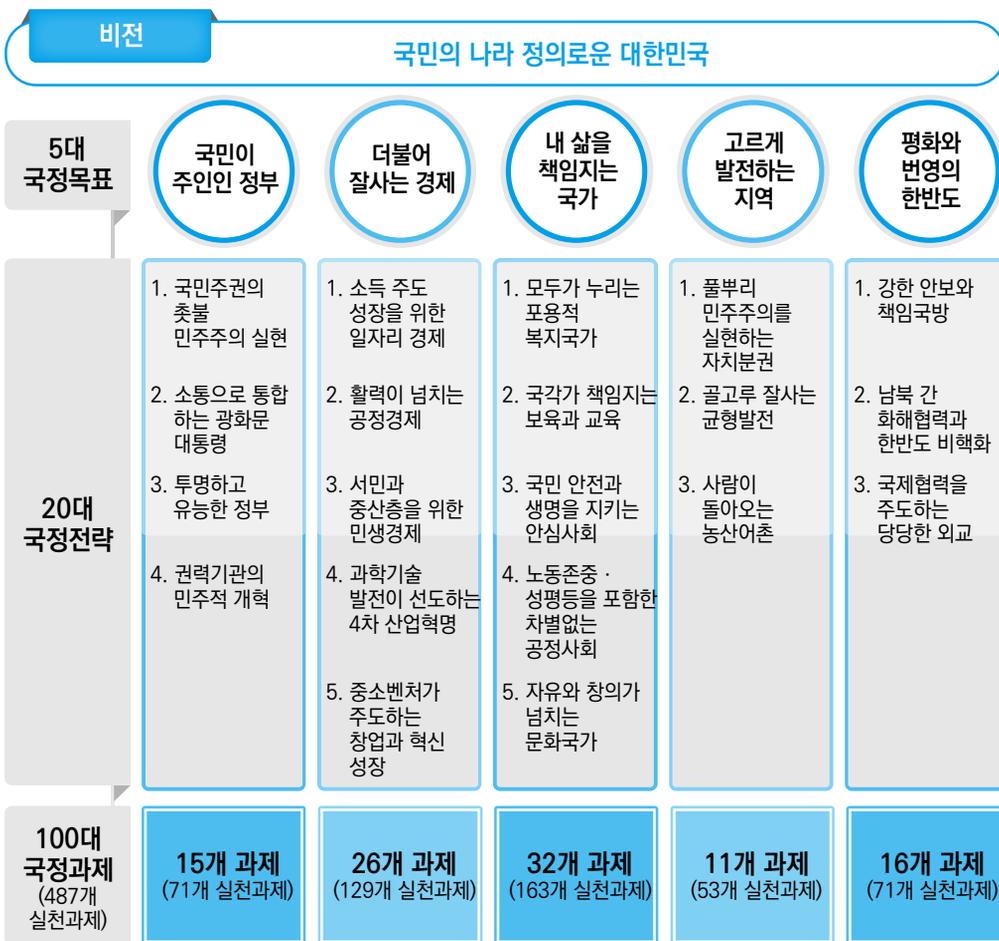
가. 문재인정부 국가비전-목표-전략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

한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에 따른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설정하였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셋째, 육아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15.

[그림 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넘치는 문화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넷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국정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가 있다.

나. 육아정책관련 국정과제

〈표 1〉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국정과제 14, 54),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국정과제 17), 4차산업혁명 선도(국정과제 33), 0-5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국정과제 42) 및 의료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44),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국정과제 48),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및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국정과제 48, 49),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가족 지원(국정과제 51, 65), 교육자치 강화(국정과제 74, 76), 통일공감대 확산(국정과제 94) 등이 있다.

〈표 1〉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 지표 개선	경찰청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복지부
	2-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미래부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 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복지부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4.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복지부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증점 추진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통합 추진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여가부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행자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교육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통일부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 나오며

지금까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정과제가 20여개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육아정책은 저출산 완화, 양육부담 해소,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 일·가정양립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 학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관련단체, 학부모, 교사, 민간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유아교육과 보육,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육아정책 분야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 상에 서 있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련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육아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소통과 통합의 과정을 통한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